

# 資料의 개방과 정책적 支援이 과제

## 影印本출판의 현황과 과제

「影印本」이란 용어는 그 출처나 개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國學관계자료의 대명사처럼 되어왔다. 실제로 영인본은 오랫동안 국학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영인본 출판업계는 인식의 부족, 자료수집의 어려움, 유통과정의 문제 등 여러가지 힘든 여건에 놓여 있다. 이에 대한 자기책이 여러 측면에서 검토되기도 했지만, 그 학문적 공헌에 비해 푸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현황과 대책을 살펴본다.

### 영인본출판의 두 領域

『原本을 사진이나 기타의 과학적 방법으로 複製한 인쇄물』李熙昇편 「국어대사전」(민중서림 86년판)은 영인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 정의대로라면 영인본에는 국학관계자료뿐 아니라 洋書의 복제(리프린트)판까지 포함되게 된다. 실제로 이런 인식 때문에 영인본의 공정성·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영인본출판에 관계하거나 그것을 학문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영인본이란 국학관계자료를 복제한 책이라는 인식정도는 상식처럼 되어 있다.

기존의 영인본은 王朝實錄·文集 등 근대 이전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영인본과 신문·잡지 등 근대 이후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영인본 등 크게 두개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를 주로 내는 출판사에는 亞細亞文化社, 景仁文化社, 民族文化社, 驪江出版社, 太學社 등이 있는데 이들중 근대 이후의 신문·잡지 영인본을 내는 출판사도 있다. 이밖에 국사편찬위원회, 서울대의 규장각, 정신문화연구원, 성균관대의 大東文化研究所, 民族文化推進會 등에서도 고전영인본을 내고 있다. 또 근대자료의 영인본출판에는 三文社, 韓國學振興院을 비롯하여 「거름」 「풀빛」 「돌베개」 「깊은샘」 등 신진출판사들도 참여하고 있다.

### 目錄선정에 專門學者들 참여

영인본은 근대 이전의 자료를 대상으로 해야 하며 그것이 영인본의 본령이라고 믿고 있

는 사람들이 많다. 경인문화사 韓相夏사장은 『영인본이란 기본史料가 될 수 있는 근대 이전의 것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근대 이후의 자료를 영인본으로 내는 출판사 중에는 삼문사와 한국학진흥원처럼 영인본출판을 주업으로 삼고 있는 출판사도 있지만 단행본출판을 주업으로 하되 중요한 자료가 입수될 때 영인본을 내는 출판사도 많다. 이들은 영인본출판의 경험이 일천하다는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다. 지난 4월, 1945~50년까지의 문학기평자료집인 「한국현대문학자료총서」(17권)를 낸 「거름」의 金祥鎬사장은 『당장은 영인본을 더 낼 계획이 없으며 단행본 간행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내에서 마스터인쇄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하여 영인본을 낸 출판사는 景仁文化社이다.

**영인본 출판은 그동안 國學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이제는, 일부 대학도서관과 몇몇 재벌의 손에 사장되어 있는 자료의 개방과 영인출판 진흥을 위해 국가적인 차원의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에 이르렀다.**

韓사장은 『당시 마스터방식을 사용하면서 처음으로 영인본이란 용어를 사용했다』고 밝힌다. 경인문화사는 60년대에서 70년대초까지 영인본출판계를 외롭게 지켰다.

그후 70년대초 국립중앙도서관장으로 있던 李昌世씨가 亞細亞文化社를 창설하면서 영인본출판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아세아문화사는 영인본의 이른바 「정식출판」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확립하였다. 전문학자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 의한 자료의 수집과 선정, 목차·색인·해제의 수록, 선명한 인쇄상태— 영인본출판에는 필수적으로 이런 책임있는 절차가 요구된다는 것. 이러한 출판자세로 아세아문화사는 영인본출판업계의 모범이 되어왔다.

7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영인본출판업계는 일부 미등록출판사들의 덤핑판매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기존의 영인본을 그대로 복사하거나 무책임한 편집으로 상태가 극히 나쁜



고전영인본은 서점 한 귀퉁이를 외롭게 지키고 있다.

영인본을 싼 값으로 판매하여 정식으로 등록된 영인본출판업계에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아세아문화사의 李昌世사장은 이에 대해 『차계에 저작권법을 발동하여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민족문화사의 申駿濤사장은 『덤핑판매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 典籍독점은 학문발전 저해

자료수집의 어려움도 영인본출판업계가 당면한 과제. 전문학자들에 의해 체계적으로 자료가 선정되려면 자료 소장자의 소재가 파악되어야 하며, 그들에 의해 자료가 공개되어야 한다. 정신문화연구원, 규장각, 국립도서관과 개인 「문집」 소장자들처럼 자료를 쉽게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대학도서관과 귀족본을 소장한 몇몇 재벌들은 자료의 공개를 극히 꺼리는 형편. 여강출판사 李順東사장은 『일부 재벌들이 막대한 典籍을 수집하고 공개하지 않는 것은 학문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개탄한다. 또 도서관의 자료가 공개되도록 이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영인본출판업계의 한결같은 여론이다.

한편 근대자료를 영인본으로 내는 출판사들은, 금기시되었던 좌익계통 활동자료들의 공개가 합법화되어 한국근·현대사를 온전히 복

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거름의 金祥鎬사장은 『한국문학의 位相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좌익성향의 작가·비평가의 글도 대폭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고전자료 영인본의 경우 미국·일본 등 해외로 판매되는 경우도 많다. 영리적인 목적보다는 국학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사명감 하나로 영인본의 명맥을 이어나가는 출판사들에 국가적인 차원의 대책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영인본출판업계 뿐만 아니라 영인본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소망이다. 요컨대 출판계의 음지에서 외롭게 자기영역을 지켜온 영인본의 성쇠는 국학의 발전여부와 맥을 같이하는 중요한 문제라는 점이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 아세아문화사 李昌世사장은 82년초에 쓴 글에서 『외국기관 또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한국학지원금 중 일정액은 한국학연구자료를 구입·지원하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영인출판에 관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영인출판 분과위원회(가칭)를 대한출판문화협회내에 설치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 엄창호 기자